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3월 28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문화유산과	담당자	• 유산정책팀장 김진석 ☎440-4471 • 담당자 한규복 ☎440-447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형 근대문화유산제도 도입 방안 마련 나선다**  
 -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11월 완료 예정 -  
 - 근대문화유산 조사·보존·활용·관광자원화 방안, 조례(안) 등 제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오는 4월 중 공모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인천시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체계 수립(조사, 분류, 보존 및 활용방안 등), ▲관광자원화 및 제물포 르네상스 지원 방안 마련, ▲문화재청의 주요정책과 연계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조례제정(안), 조직관리 체계, 역할 분담 방안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근대문화유산은 문화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최근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문화자원이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상위법령이 없자보니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 등에 대한 대책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개항장을 비롯한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오는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조례제정, 근대문화유산 (후보)선정 등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용역은 기존 문화재 관리 방식과는 달리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재산권 등에 대해 침해는 없으면서,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단순 건축학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를 넘어, 시민들이 즐기고 향유하던 시, 수필, 음악, 영화, 노포, 장소 등과 같은 기억이나 추억 등을 조사하고 기록화해 미래 세대에 남긴다는 점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동우 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용역은 그동안 산재돼 있던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인천시만의 독특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찾는 시작의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 시민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근대문화유산 관리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